



후쿠시마
핵 오염수 QnA
2~3면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판
4면

프랑스
인종차별
반대 소요
5면

러시아 용병 쿠데타와
우크라이나 전쟁
6, 7면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10면

미국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자금심 파업' 16면

문지마 방류 기시다 괴담 처벌 윤석열

핵 오염수 동맹 반대한다

관련 기사 2~3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Q&A

핵 오염수 왜 생겼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뒤이어 밀어닥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냉각 기능이 마비됐다.

고열의 연료봉과 물이 반응해 생긴 수소가 발전소 건물 안에서 폭발해 1~4호기 건물의 천장이 날아가 버렸다. 이어 1~3호기의 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압력용기의 밑바닥도 녹아 연료봉이 격납용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핵연료가 폭주하지 않도록 10년 동안 쏟아부은 물과 주변에서 흘러든 지하수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로 오염됐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이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형 탱크에 보관해 왔다.

오염수에는 뭐가 들어 있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만 안다.

핵반응이 계속되고 있다면 녹아내린 핵연료에서는 이론상 1000가지 이상의 핵종(원소)이 나올 수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년 사이 핵반응은 멈춘 것으로 보인다.(확실치는 않다.)

그렇다면 반감기가 짧은 수백 종은 지난 12년 사이에 사라졌을 것이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중에 방사성 물질 64종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해 알프스로 제거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런데 최근 그중 39개는 더는 검출되지 않는다고 검사 대상을 25개로 축소했다.(여기에 5개 핵종을 새로 추가해 30개 핵종을 대상으로 검사해 왔다고 발표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패널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 측이 제공한 오염수 시료 검사 결과를 살펴본 뒤 오염수 탱크 안에 있는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첫째, 무거운 물질들은 탱크 바닥에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 측이 제공한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무슨 '검증'이라도 하는 양 굴고 있다. 마치 대참사를 낳았던 가슴기 살균제의 출시를 식약처가 허가했을 때, 제조사의 보고서만 보고 '안전하다'고 했던 것과 똑같다.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정서가 광범하고 행동도 늘어나고 있다

침전됐을 텐데 도쿄전력 측이 밝힌 채취 방법에는 이 침전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탱크 윗부분의 물만 채취해 검사했을 경우 실제 방사성 물질의 농도 보다 매우 낮게 측정됐을 것이다.

둘째, 방사성 붕괴 과정을 고려했을 때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그 비율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도쿄전력 측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그 비율이 크게 불일치한다.

알프스ALPS는 무슨 기능을 하나?

알프스는 대형 정수기라고 보면 된다.

도쿄전력 측은 알프스의 여러 가지 필터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도 검증된 바는 없다.

알프스를 한 번 통과한 오염수에는 여전히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 도쿄전력 측은 이를 인정하지만 여러 번 통과시켜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패널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의 검사 결과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그런데 700건이 넘는 검사 중 다섯 번만 19개 핵종(원소)의 농도를 검사했고 나머지는 7~9개 핵종만 검사했다. 자신들이 말한 64개 핵종조차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도 도쿄전력 측으로

부터 건넌받은 자료와 시료를 들여다 볼 뿐, 그 자료와 시료가 어디서 난 것 인지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문가패널 소속 과학자들은 이런 IAEA의 태도에 "놀라고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즉, 알프스를 통과한 '처리수'에도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측은 일체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얼마나 위험한가?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만 안다.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 측이 제공한 자료만 들여다보면서 무슨 '검증'이라도 하는 양 굴고 있다. 마치 대참사를 낳았던 가슴기 살균제의 출시를 식약처가 허가했을 때, 제조사의 보고서만 보고 '안전하다'고 했던 것과 똑같다.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은 매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사람 몸에 직접 노출되면 세포와 유전자 수준에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양에 따라 피부염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1호기 바닥에서 발견된 핵연료에 가까이 갈 경우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① 최악의 경우 :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측의 설명과 달리 매우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물질이 대량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는 과거 핵보유국들

의 대기 중 핵실험처럼 지구 환경 전체(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다.

② 최선의 경우 :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삼중수소만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과 유기물을 해양 생물이 섭취할 경우 생물 농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 내 장기가 여러 해 동안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며칠이면 방사성 물질이 체외로 다 배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조차 "일부는 배출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하고 인정한다. 유기물과 결합될 경우 더 오래 남을 수도 있다.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나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광대한 태평양 바다에 희석되면 괜찮지 않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것보다야 덜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여길 근거는 별로 없다. 폐로까지는 100년가량 걸릴 수 있고 그때까지 오염수는 계속 나올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 2면에서 이어짐

해류도 공장 컨베이어 벨트처럼 영구적으로 고정된 흐름이 아니다.

기준치(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의 방사선 노출은 ‘안전하다’는 말도 틀렸다. ‘저선량 방사선 노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BEIR 7)에 따르면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돼도 그에 비례해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방사선 노출 기준치는 '안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수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예컨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노출 기준치는 일반인의 10배가 넘기도 한다. 그들의 신체가 방사능에 저항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도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준치 이하'가 아니라 방사선 노출의 절대량 자체를 최소화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CT 등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검사를 통해 얻을 이익이 분명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IAEA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옳게 비판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평범한 사람들이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에 있는 심중수소
도 엑스레이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오염수 방류로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확률적으로 분명히 일부는 암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설령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결코 안전하다고 하거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게다가 방사선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단순히 방사선의 강도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나이나 성별, 노출 경로, 노출 시간 등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은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흡수선량(시버트, Sv)이라는 단위로 환산하는데, 그 계산법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방사성 물질 자체를 섭취했을 때 벌어지는 내부 피폭의 위험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게 특히 치명적
이었던 것과 정반대로 방사선은 아이
들에게, 특히 태아에게 엄청난 악영향
을 끼칠 수 있다. 세포 분열이 활발한
때에는 방사선으로 유전자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
이나 CT 촬영을 피하는 이유다. 태아
를 관찰하는 데에는 초음파가 주로 이
용된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험에 비춰 보면 선천성이상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보상받기도 어렵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출생아 1만 명당 선천성이상아 비율이 2009년 516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1538명으로 200퍼센트나 늘었다. 저출산과 고령 산모의 증가로 인한 비율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수치다.(2020년 영국의 선천성 이상아 비율은 출생아 1만 명당 222명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

기시다 정부는 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할까?

도쿄전력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술한 위험 경고
들을 부정하며 핵발전소를 건설·운영
해 온 자들이 막상 사고가 나니 비용 부
담을 들먹이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
본 정부가 최근 빠르게 늘리고 있는 군
비 지출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많은 것
도 아니다.

전임 일본 총리 간 나오토는 2021년
에 한 인터뷰에서 “원전 부지 북쪽에

방수구 7호, 8호기를 지을 땅이 비어 있다. 그곳에 오염수 저장 탱크를 증설하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베 도모코 중의원도 “모래를 섞어 고체 보관하자”며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도쿄전력 측이 밝힌 다른 이유는 “바람직하지 않은 소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오염수 방류의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즉, 핵발전과 그 폐기물인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숨기고 싶다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지금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는 듯하다.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괴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시도에 관한 경고가 ‘괴담’이었다는 우파의 비난은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자들인지 보여 준다.

첫째,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광우병 같은 치명적 피해를 입을 가능

성이 있다면 막을 필요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바 있다.

둘째, 그 운동의 성과로 쇠고기 수입 절차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더 많이 수입됐을 것이다.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육골분 사료 사용에 관한 규제도 강화됐다.

셋째,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은 그런 시도 중 일부였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정책인데, 당시 운동 참가자들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제조차 내팽개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웠고, 이명박은 관련 정책 추진을 상당히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괴담이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을 보
호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고였던
것이다. 물론 이 경고가 일부나마 효과
를 거둔 것은 거대한 대중운동이 벌여
졌기 때문이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운동도 더 커져야 한다.

장호종

▶ 추천 동영상 과학 들이밀며 핵 오염수 안전하다고?

영상 보기





시사/이슈 焦點

노동자연 TV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과학 동원해 핵 오염수 안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에 직격 날린다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입시 경쟁 강화하면서도 사교육 업체 비난하는 위선

강동훈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사례 2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체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비난한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됐다고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별 볼 일 없다. 수능 출제진과 수능 문제 검토에 현직 교사의 비중을 높여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내고,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와 학교 수행·지필평가가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게 거의 전부이다.

EBS와 방과 후 교실 등을 이용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고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수능 문제와 EBS 교재의 연계율을 이리저리 바꿨는데도 사교육비 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실패한 정책의 재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킬러 문



중·고등학교 서열화까지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항 사례 발표는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학생 상당수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은 빠지고, 보통의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 문제들이 킬러 문항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이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혼란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다. 그들은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비난했지만,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는 다며 6월 28일에는 메가스터디·종로학원·시대인재와 같은 대형 입시학과 연봉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공세에 서울 강남의 대형 학원들은 입시설명회를 취소하고, 광고 문구에서 '킬러'를 삭제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사교육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설사 수능 관련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신과 수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커질 것이다.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의 산물이지 입시 경쟁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과 초등 의대 입시반도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고등학생뿐 아니라 유아와 초등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국제중학교와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을 확대하며 초등학생·중학생 입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이런 정책에 순진하게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사교육 업체들을 공격하며 급등하는 사교육비와 치열한 입시 경쟁 완화에 나선 것처럼 보이려 애쓰지만, 이는 데마고기일 뿐이다.

입시 경쟁의 진정한 원인인 대학 서열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데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학교 서열화 강화에 길을 터 준 민주당

정부의 수능 정책이 큰 불만을 자아내자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수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당분간 현 입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급등하는 사교육비로 이미 수십 년간 고통 받아 온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리 없다.

특히, 역대 민주당 정부도 입시 경쟁을 강화시키거나 온존시켜 왔다. 외고를 대폭 늘리고 자사고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정부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이다.

문재인도 2017년 대선 전에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영형 사

립대학을 통합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대학 서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권한 뒤에 한 일은 전혀 없다.

민주당은 국제고·외고·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제고·외고·자사고 폐지를 2025년으로 미루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특목고·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 문재인 정부다.

고교 서열화

민주당 정부의 이런 배신 때문에 2018년에 19조 5000억 원이던 사교육비는 지난해에 26조 원으로 늘어났다. 1인당 사교육비는 더욱 급증해 2018년에 월 평균 29만 1000원에서 지난해에는 41만 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무상화 정책으로 생색을 냈지만, 사

교육비로 그 이상을 지출하게 만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도 문재인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대학 서열 체계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입시 경쟁 완화 정책은커녕 '공정한 입시 경쟁'에 공약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수능 정책으로 큰 불만을 사고 있는데도 정책 시행을 미루라는 별 볼 일 없는 비판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의 비판은 민주당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정의당도 대학 서열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대선 공약에서 "대학 네트워크"와 "공동 학위제"에 관해 말하긴 했지만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았다. 지방 국립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정책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서열 체계를 완화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입시 경쟁의 폐해를 없애려면 서열화돼 있는 대학 서열 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교육운동 단체들이 대학 평준화, 입시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주장해 온 까닭이다.

덧붙이자면, 대학 서열 체제는 경쟁적이고 위계적으로 조직된 자본주의 체제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체제에 맞선 저항이 커져야 한다.

그런데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도 당장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며 대학 서열 폐지 요구를 점점 소홀히 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우선시해 진정한 대안을 회피한다면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학생·학부모들의 좌절감을 부채질할 것이다.

대학 평준화와 입시 제도 폐지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소동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프랑스

경찰의 10대 소년 나헬 살해 이후
분노가 거리를 휩쓸다

이 기사가 쓰인 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살인 경찰을 종전의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하며 거리의 분노를 달래려 했지만 항의 운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6월 28일 밤 프랑스에서 폭동과 분노에 찬 시위가 최소 10개 지역을 휩쓸었다. 경찰이 17세 소년 나헬을 총으로 쏜 살해하고 거짓말을 한 직후였다.

경찰은 27일 파리 외곽의 낭테르에서 나헬을 총으로 쏘다. 경찰은 알제리계인 나헬이 차를 세우라는 말을 듣지 않고 경찰을 향해 돌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위터에 게시된 동영상 보면, 경찰은 교통 체증으로 멈춰 선 차량 옆에 서 있었다.

한 경찰이 [창문을 통해] 운전자 나헬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가 나헬이 차를 빼려고 하자 심장에 발포했다. 이 살인자가 발포하기 전, 한 경찰이 “네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을 거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다른 경찰관이 “짜 버려”라고 말한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로 인해 경찰이 평범한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됐기 때문에 벌어졌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경찰에게 분노했다. 구급대원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야 될 것이다. 낭테르가 깨어날 것이다. 그는 아직 옛돼 보인다. 고작 운전 면허가 없다고 [죽인 것인가]? 면허가 없다고?”

“나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크고 자라는 모습을 봤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혼자 키웠고, 그녀는 아들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나중에 이 구급대원을 체포했다.

27일 밤 분노한 시위대는 쓰레기통을 불태우고 버스 정류장을 부수고 낭테르의 도로를 차단하려 했다. 일부 시위대는 지역 경찰서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려 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고 대규모 체포에 나섰다.

그러자 28일 큰 군중이 파리의 레퐁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우고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원래 이들은 환경 단체인 ‘지구의 봉기’를 정부가 탄압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나헬을 위한 정의를” 경찰의 살인에 분노한 시위대가 6월 29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모인 사람들이었다.

이후 다시 한 차례 낭테르에서, 그리고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경찰에 맞선 폭동이 시작됐다. 자정 무렵에는 릴, 루베, 렌, 리옹, 아미앵, 그리고 수도 교외의 그리니와 비리샤티옹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릴에서는 시위대가 시청 건물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경찰과 인종차별에 맞선 분노

한 좌파적 트위터는 파리와 그 일대 5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집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후퇴해야 했다.

나헬의 어머니 무니아가 아들의 죽음을 비통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며 시위집압부대(CRS) 경찰들이 단체로 비웃는 영상이 폭로되면서, 시위대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29일 오후 낭테르에서 대규모 행진이 예정돼 있다. “모두 오세요, 아들을 위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하고 무니아는 말했다. [29일 그녀가 이끈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프랑스, 영국 또는 어디에서나 거의 항상 그렇듯이, 경찰과 그들의 편인 언론은 희생자를 비방하려고 했다. 극우와 가깝게 지내는 언론인 살롯 도넬라스는 C뉴스 채널에서 나헬의 “전과 목록이 그의 팔 길이 만큼이나 이미 길었다”며 “경찰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

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짓말은 소셜 미디어에서 널리 퍼졌다.

이에 나헬 가족의 변호사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헬 가족은 오늘 벌어진 것처럼, 없는 범죄 기록을 만들어 낸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나헬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총격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을 사랑하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조차 살인을 옹호하지 못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살인은 옹호하기 힘들어졌다. 그러자 경찰의 “노조”인 프랑스경찰연합은 발끈했다. 노조는 대통령이 “유죄가 선고되기도 전에 우리 동료를 비난함으로써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도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파시스트 마린 르펜은 경찰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극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경찰의 권위라는 문제가 있다. 경찰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무규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7년 사회당 출신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 재임 시절, ‘정당방위’ 수단으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후 경찰의 살인이 급

증했다. 법 개정 이후 ‘지시 불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했고 지난해 최소 13명이었다.

프랑스의 마지막 대규모 전국적 폭동은 2005년에 벌어졌는데, 당시 청소년 두 명이 경찰의 검문과 수색을 피하려다 변전소에서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낭테르의 한 청년은 29일 아침에 이렇게 말했다. “2005년 이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얘기를 어른들에게 들었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희생된 이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어갔다. “[2017년] 테오, [2016년] 아다마, [2005년] 자이드와 보우나에 이어 이제 나헬입니다. 수년 동안 경찰은 문제적 행태를 보여왔고 저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반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최대한 소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의 분노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올해 초 연금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간 시위를 벌일 때 터져 나온 마크롱과 경찰에 대한 격렬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거리에서 전투적인 시위를 벌이는 대중만이 나헬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Rage on streets of France after cops murder teenager Nahel' (2023. 6. 28) / 번역 박이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리고진 쿠데타의 실패에도
푸틴의 통제력이 악화되다

2년 반 전, 세계 제일의 핵무장 국가인 미국에서 극우가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번에는 세계 제2의 핵무장 국가에서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 “정의의 위한 진격”을 했다가 중단한 과정에 관해 많은 것들이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들도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국가 핵심부에 있는 억압 기구들이 심각하게 분열해 있다는 것이다.

프리고진은 잡범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핫도그 장사를 하다 푸틴의 요리사가 된 뒤 그 지위를 이용해 러시아의 주요 인물로 부상한 자다. 프리고진의 전력은 러시아 정치체제가 얼마나 사적인 연줄 위주로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프리고진의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의 지도 아래 창설됐고, 국가 권력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 바그너 그룹은 민간 기업이어서 러시아 국가가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무력을 해외로 투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실을 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 처음 활약한 바그너 그룹은 푸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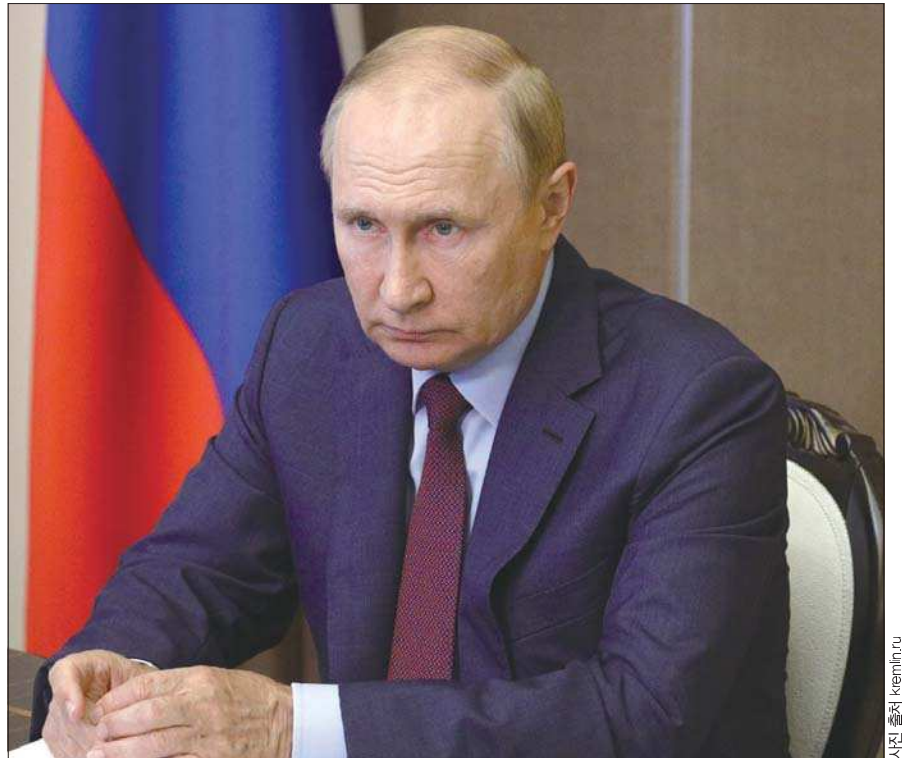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때에도 투입됐다. 바그너 그룹은 극악무도한 행위로 악명을 떨쳤다. 더 최근에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정부가 벌이는 신식민주의적 확장 노력의 중심에 있었다. 바그너 그룹은 취약한 현지 정부들을 지원하고 그곳의 자원을 통제했다.

바그너 그룹의 활동은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톡톡히 성과를 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옛 식민지 여러 곳에서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프랑스의 군사적 개입이 오히려 역풍을 낳고, 프랑스 외교관들과 기업들은 신식민주의적 내정 간섭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용병 반란으로 러시아 국가 핵심부의 분열이 드러났다

이런 과정이 가장 진척된 곳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러시아인들에게 말 그대로 노다지다. 국가도 없고 국경도 없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곳이다.” 한 번은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관리들이 러시아행 항공기를 검사했더니, 쿠키가 담겨 있다고 적힌 상자에 금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로 돌아와야 했다. 키예프(키이우)를 점령하려던 러시아의 최초 공세가 실패한 뒤 푸틴은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수많은 재소자들로 새로운 군대를 총원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젊은 노동계급 남성들을 너무 많이 징집하는 일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다른 국가 기구들도 독자적 무장 조직을 만들었다.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이 그런 사례다.

바그너 그룹은 전투에서 능력을 보여 줬다. 치열한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의 도시 바흐무트를 결국 장악한 것이다. 프리고진은 한 인터뷰에서 바그너 그룹이 그 전투에서 1만 명의 전사자를 냈고,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그 세 배였다고 주장했다. 프리고진은 군 수뇌부인 세르게이 쇼이구와 발레리 게라

시모프를 비난했다. 그들이 무능하고 바그너 그룹을 몰자 부족에 허덕이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정부가 바그너 용병 같은 “자원자”들을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하도록 결정한 것이 이번 반란의 계기가 됐다. 그 결정을 보고 프리고진은 푸틴이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편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프리고진의 단명한 반란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 반란이 거둔 성공이다. 반란이 시작된 로스토프나도누 지역에서 그 반란은 꽤 지지를 받았던 듯하다.

반란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군의 시도가 일부 있기는 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보로네시에서 교전이 벌어져 러시아군 1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공군력 등을 동원해 바그너 용병들을 제거하려는 만만찮은 시도는 없었던 듯하다. 그랬다가는 군대 내 반란이 확산될지도 모른다고 푸틴이 우려했을 수 있다.

프리고진이 어떤 주요 정치 세력에 게서도 쿠데타 지지를 받지 못해 진격을 멈추고 벨라루스 망명에 동의했다

▶ 7면으로 이어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러시아의 용병 반란이 보여 주는 것

지난 주말 러시아 용병 집단의 우두머리 프리고진의 “모스크바를 향한 행군”은 하루만에 무산됐지만 막후의 자세한 일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뚜렷한 결과들도 있다. 24시간 동안 불거진 패닉과 불확실한 상황은 러시아 지배계급과 군부 내의 분열을 선명하게 보여 줬다.

프리고진의 바그너 용병 그룹은 광대한 영역을 손쉽게 장악했고, 그중에는 핵심 군사 중심지인 로스토프나도누도 있었다. 푸틴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 사태에서 득을 보려 했고, 쿠데타 감행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6월 21일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은 용병 그룹 지도자 프리고진이 러시아 고위 국방 관리들에 대항하는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위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보고했다. 그로부터 며칠 전 미국 첩보기관들은 프리고진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징후를 감지했다.”

현재 러시아 국영 언론은 프리고진이 반란을 접어 푸틴이 대승을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민간 군사기업들을 국방부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새 법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그 법을 도입하면서 나온 말들은 바그너 그룹에 매우 유화적이었다.

러시아 국가두마(러시아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로스토프나도누의 바그너 용병들이 “비난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저 지휘관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카르타폴로프는 그 용병들이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고, “로스토프의 주민들, 남부 군사구역의 병사들, 사법 기관들” 어느 누구도 그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용병들을 두둔했다.

카르타폴로프는 바그너 그룹의 운영

러시아 정부가 용병 반란에 보인 반응은 푸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6월 24일 로스토프나도누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

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부대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극도로 억압적인 정부가 광범한 군사 반란에 보이는 반응 치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바그너 그룹이 누리는 지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나, 더 광범한 반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이런 반응은 푸틴을 유약하게 보이게 만든다.

한편, 푸틴은 프리고진의 쿠데타를 두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은 러시아의 단결을 깨뜨리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조국과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이다. 그 타격은 1917년 러시아가 제1차세계대전에서 싸웠지만 승리를 도둑맞았을 때 입은 타격과 비견할 만하다. 군대와 국민 등 뒤에서 벌어진 음모와 다툼, 정치 공작은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졌다. 군대와 국가의 와해, 거대한 영토의 상실, 비극과 내전을 낳았다.”

푸틴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언급한 것은 그가 진정한 반란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0월 혁명은 “등에 칼을 꽂는 짓”이 아

니었다.(그 표현은 독일의 병사들이 당시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독일 지배계급도 사용했던 것이다.) 10월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제국주의 전쟁을 지속한 ‘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노동자·병사·농민이 일으킨 거대한 운동이었다.

모든 제국주의에 맞선 반란

그런 운동이 지금 필요하다. 프리고진의 쿠데타는 우크라이나의 유혈낭자한 반격에서 세간의 이목을 돌렸다. 나토가 자금과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 공세는 경악스러운 규모의 사상자를 내고도 얼마 안 되는 소득밖에 얻지 못했다.

한 미국 언론은 이렇게 인정했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대공세가 3주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제공한 첨단 무기로 무장했음에도 여러 우려스러운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꼬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방어선을 보호하는 광활한 지뢰밭이 남부의 타트인 대초원으로 진격하는 우크

라이나군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배자들과 장군들이 인명 손실에 개의치 않고 공세를 실시한 제1차 세계대전의 살육극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기는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

권력층의 책략이나 군부의 한 캉패 집단을 다른 캉패 집단으로 갈아치우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군부와 정치인, 전쟁을 낳는 체제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반란이 동·서방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영국에 사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보수당과 미국, 나토가 주적이다. 대부분의 좌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 그들은 푸틴의 범죄를 덮어 주거나, 반대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주는 것을 반긴다. 그러나 진정한 슬로건은 러시아 철군, 나토 확전·확장 반대, 모든 제국주의 반대, 모든 지배계급에 맞선 혁명적 운동 건설이어야 한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Revolt against all the ruling classes' (2023. 6. 27) / 번역 이원웅

▶ 6면에서 이어짐

는 추측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언론인 벤 주다는 〈텔레그래프〉에 이렇게 썼다. “그 쿠데타는 러시아 역사의 확실한 전환점이다. 러시아는 올리가르히의 시대에서 … 사병을 거느린 군벌

들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다.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의 샘 그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지배층이 자신들의 미래에 열광하고 푸틴의 성공에 계속 투자하게 하기에 충분한 축재의 기회

를 만들어 냈다.”

그럼에도 푸틴은 분명 크게 약화됐다. 푸틴은 바그너 그룹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바그너 그룹은 이제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더는 믿을 만한 도구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푸틴은 자

기 군대의 충성도 믿을 수 없게 됐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의 판돈을 키우는 것으로 대응할 공산이 커졌다.

출처 Alex Callinicos, 'The attempted coup weakens Putin's grip' (2023. 6. 26) / 번역 이원웅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글은 6월 28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열두 번째 시간'이었다.



오늘 얘기는 1925~19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혁명은 시리즈 두 번째 강좌에서 다뤘습니다.

1927년 혁명 패배 후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광둥·추쑤 봉기 등 초좌파적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봉기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나마 남아 있던 노동계급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잔존 세력은 도시의 노동계급 기반을 복구하려 하지는 않고 산간 벽지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마오쩌둥하에서 공산당은 농촌에서 유격전을 벌이며 민족주의 정당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도시에서 노동계급 속에 뿌리내리려 애썼습니다. 1930년대 초반 한때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규모가 러시아 다음으로 컸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탄압 등 혹독한 시련을 무수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악전고투하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오늘 저는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추구했던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활동을 돌아보며,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 보려 합니다.

중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의 탄생

중국에서 트로츠키주의 운동은 1925~1927년 혁명 패배의 여파 속에서 형성됐습니다.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스탈린이 지도한 당시 코민테른에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 혁명이 자본주의적 혁명이고 국민당이 이 혁명을 지도할 것이라며, 공산당을 국민당에 예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1927년 4월 장제스의 쿠데타와 7월 국민당 좌파 왕징웨이 배신으로 파탄났습니다.

그러자 스탈린은 당시 중국공산당 지도자 천두슈에게 패배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습니다.

한편 트로츠키는 식민지나 반식민지의 자본가들은 제국주의 억압과 지주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늦게 등장해 너무 취약하고 또 아래로부터 부상하는 노동계급 투쟁에 두려움을 느껴, 자본주의적 혁명도 지도하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제국주의를 쫓아내고 지주제도를 폐지하는 과업은 노동계급의 혁명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27년 중국 혁명의 패배는 트로츠키의 이런 연속혁명론이 비극적으로 입증된 일이었습니다.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 내에서 중국 혁명의 패배를 두고 스탈린주의 관료들과 트로츠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에서 트로츠키의 주장은 패배의 원인을 숙고하던 일부 중국 공산당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련에서 공부하던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트로츠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 집단의 주요 리더였던 왕판시는 1928년 겨울 모스크바 거주 중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트로츠키주의자가 급속히 늘었다고 회고합니다. 특히 모스크바 중산대학에서는 전체 학생 400명 중 100~150명이 트로츠키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때에 이는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소련 유학생 트로츠키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스탈린 국가의 감옥에 갇히거나 살해당해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은 '우리의 말(我們的話)'이었는데, 그 정간물 지지자들은 젊지만 노동운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중에는 중국공산당의 간부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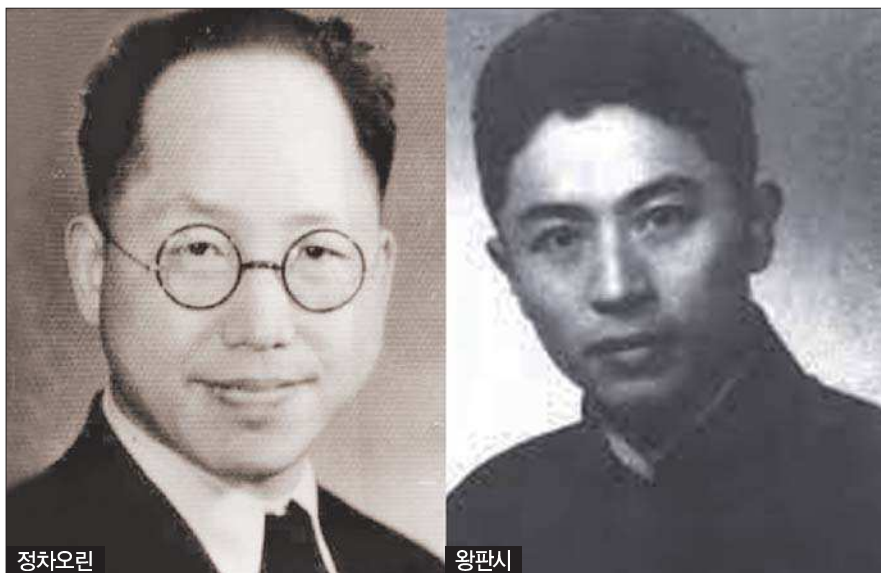
중국 국내에서 천두슈와 그의 지지자들도 트로츠키주의자가 됐습니다. 1927년 패배 직후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에서 사임한 천두슈는 트로츠키의 주장을 뒤늦게 접하고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트로츠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가 공산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가 쓴 '우리의 정치적 의견'이라는 문서는 중국 트로츠키주의 선언문 같은 지위의 글이 됐습니다. 천두슈 그룹은 '무산자(無產者)'라고 불렸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트로츠키주의 소그룹이 두 개 더 형성됩니다.



천두슈

평수즈



정차오린

왕판시

일본 제국주의, 국민당, 공산당의 탄압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

하지만 네 개의 트로츠키주의 그룹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이 1927년 패배 때까지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랐던 천두슈를 한동안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트로츠키의 강력한 촉구로 네 그룹은 1931년 5월 통합해 중국공산당 좌익반대파로 출범했습니다. 그때 조직원 규모가 무려 48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탈린주의에 반대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지키고 노동계급의 혁명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시련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 트로츠키주의자로 사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당 치하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공개적 정치 활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국민당 특무기관에 끌려가면 종종 재판도 없이 처형됐습니다. 더구나 중국공산당도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온갖 중상모략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물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트로츠키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1931년 조직 출범 후 채 몇 달 지나지 않아 지도부 전체가 국민당 보안경찰에 잡혀가는 등 혹심하고 지속적인 탄압이 중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상하이, 홍콩, 광저우, 중산, 윈저우 등지에서 조직을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항일 민족주의 정서가 강력해집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주의 정서는 더욱 강화돼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1937년 트로츠키는 멕시코 화가 디에고 리베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중국의 모든 노동자 조직의 임무는 일본에 맞선 지금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강령과 독립적 활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격전에 뛰어든 일부 개인들을 제외하면 중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이 모두 트로츠키주의자들과 함께 싸울 생각이 전혀 없고 때



중일 전쟁과 이후 미국의 대일 선전포고는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과 분열을 낳았다

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주로 상하이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려 했지만 일본군 점령하에서 혹심한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영향력 확대에 큰 장애가 됐습니다.

중일전쟁에 이어 1939년 제2차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일전쟁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성격이 분명했지만, 제2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간 전쟁이라는 점이 당시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천두슈는 중일전쟁과 세계대전 모두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파시즘에 맞서는 전쟁이라며 서방을 지지했습니다. 독일 파시즘과 소련 스탈린주의 모두에 비판적이었던 게 지나쳐 서방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주장은 다른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중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은 분열해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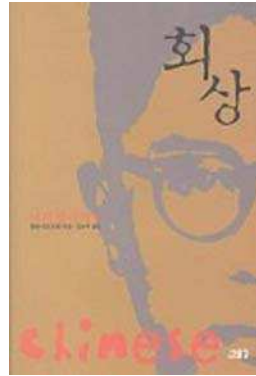
왕판시와 정차오린 등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모두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간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평수즈 등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반(半)식민지인 중국에서 진보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중국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면서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평수즈 등의 다수파와 왕판시·정차오린 등의 소수파로 조직이 분열해 버렸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승리와 신중국 탄생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중국에서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이끌 사상적·조직적 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로츠키주의 조직은 여전히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돼 있었



회상 나의 중국 혁명

왕범서(왕판시) 지음, 김승욱 옮김, 새물결, 432쪽, 13,900원

고, 둘을 다 합쳐도 1931년 통합 때의 절반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조직 분열 외에도 사상의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바로 1949년 중국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신중국을 세운 일을 둘러싸고 그랬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중국 대륙에서는 바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에 기반을 둔 중국공산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설사 승리해도 도시에서 자본가 및 노동자 모두와 대결해야 하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로츠키는 식민지나 반식민지에서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지주제도를 폐지하는 과제는 노동계급 권력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런 예측에 따라 노동계급과 괴리된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잡을 수 없다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승리해 국민당과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지주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국 혁명은 민족해방 혁명이었지,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연속혁명을 실현할 주체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이 부재한 가운데, 중간계급 지식인들이 농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아 당대 중국 사회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며 국가자본주의 건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트로츠키의 예측을 믿었던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1949년 혁명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노동계급이 아니라 중간계급인 지식인과 농민에 기반을 둔 사회

세력이 역사적 숙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는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과 맞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그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신중국이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해야 했습니다.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다수파인 혁명적공산당은 실제로 그렇게 현실을 이론에 꿰어 맞춰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수파인 국제주의공산당도 혼란스럽기는 비슷했습니다. 소수파의 지도자 왕판시도 다수파처럼 트로츠키주의의 정설에 현실을 꿰어 맞추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소수파의 다른 지도자 정차오린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자본 계급을 대표하고, 1949년에 수립된 신중국은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적공산당 지도자 평수즈나 소수파 지도자 왕판시와는 완전히 다른 견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차오린은 1952년에 체포돼 노동교화소에서 27년을 징역살이 했기 때문에 이 견해를 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1952년 탄압과 그 이후

비록 이데올로기적 혼란은 있었지만,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토지 개혁이나 기아 반대 행진 등 중요한 쟁점에 개입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노동계급 내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증가했습니다.

1952년 중국공산당이 트로츠키주의 조직을 불법화하고 그 구성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강력한 국민국가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해야 했는데, 노동계급에 뿌리내리던 트로츠키주의자들을 그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500여 명이 넘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노동교화소로 보내졌고, 다른 일부는 사기가 저하돼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트로츠키주의 운동은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일부 활동가들이 홍콩으로 가서 조직을 유지했지만, 그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68운동의 영향으로 홍콩에서 청년들이 급진화되자, 우중셴을 중심으로 일부 급진적 청년들이 《70년대》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트로츠키주의를 받아들이며 홍콩에서 트로츠키주의 운동이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내

▶ 10면으로 이어짐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는 더는 낮은 존재가 아니고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인 풍자 씨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얼마 전에는 사이클 선수 나화린 씨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대회에 출전했다.

나화린 선수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과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숨어 있기는 좀 너무 겁쟁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용기 있게 나와 꿈을 펼치는 트랜스젠더들을 응원한다.

트랜스젠더는 일상에서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다.

트랜스젠더는 외모·목소리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성과 성별 정체성 혹은 법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성별 이분법적인 이 사회에서 여러 편견과 법·제도적 차별에 시달린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은 공중 화장실 이용에서부터 직장을 구하는 문제까지 수없이 많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유난히 천대받고 성소수자 중에서도 보통 더 취약한 처지에 있다.

일부 우익의 트랜스젠더 공격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익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보수적 의제로 사람들을 결집하는 데 트랜스젠더를 희생양 삼고 있다.

트랜스젠더 혐오적 우파는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다. 편협하게도 그들은 생



변희수가 꿈꾸던 미래를 위해 싸우자. 2021년 10월, 국방부 앞

물학적 성만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트랜스젠더가 겪는 ‘성별위화감’도 단지 잘못된 심리적 상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급진적 페미니즘의 일부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을 부정한다. “트랜스야옹이”라는 모욕적 표현도 나온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더라도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다. 인류 역사에는 여러 성별의 존재와 표현, 성적 지향이 인정되는 사회들이 있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에는 성이 남녀 두 개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부족도 있었다.

문제는 남과 여라는 두 성별로 모든 사람을 묶어 넣으려는 이 사회다.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 정정이나

의료적 트랜지션(성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성전환 수술은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신체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법원이 법적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흔히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 UN은 법적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

이런 엄격한 요건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비급여인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법적 성별을 정정하지 못하면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서 큰 곤란을 겪고, 그럼 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청소년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있

다. 최근 <서울신문> 기자들이 쓴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대답해도 듣지 않는 학교를 떠나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중단한다(평균의 27배). 가족과 학교 내에서 맞닥뜨리는 편견과 차별로 일상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트랜스젠더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은 법적 성별 정정 요건 완화와 성별정정특별법 제정, 의료적 트랜지션에 보험 적용,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표기 삭제(난수화)를 요구한다. 성중립 화장실 설치도 중요한 요구다.

이는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겪는 극심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들이고,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것들이다.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성지현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양효영, 샐리 캠벨 지음
책갈피, 184쪽, 9,000원

▶ 9면에서 이어짐

부 갈등으로 혁명공산당과 혁명마르크스주의자동맹으로 분열했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활동했던 트로츠키주의자 중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작고한 상칭(사진)입니다. 그는 1952년 탄압 전에 트로츠키주의 다수파의 핵심 인물이었고 홍콩에서는 혁명마르크스주의자동맹에서 활동했습니다.

그가 지난해 사망하기 직전까지 대륙의 젊은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교류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노동운동이 급성장하는 중국은 트로츠키주의가 다시금 지지자들을 얻을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처음에 커다란 세력이었던 1930년대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혁명 운동을 이끌기는커녕 실질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혹독한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엄격한 조건에서도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사상을 견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민당, 일본 제국주의, 더구나 중국공산당의 가혹한 탄압으로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2년 중국공산당의 대대적인 탄압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둘째, 결정적 시기에 나타난 정치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소련 사회의 성격과 1949년 신중국의 성격에 대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트로츠키주의 진영 내에서는 분열과 사기저하 그리고 마오쩌둥 세력에 투항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자본주의론이 왜 혁명적 실천의 등대가 되는지를 중국 트로츠키

주의자들의 약점이 잘 보여졌습니다.

또한 연속혁명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전략이므로 그것을 계획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은 배웠어야 합니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적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적 중간계급 혁명이었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특무기관과 일본 제국주의의 감옥 그리고 마오쩌둥의 노동교화소에서 살해당하거나 고초를 겪으면서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지키려 했던 중국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경의를 나타내며 오늘 발제를 마칩니다.

윤석열 퇴진 요구 포함된

민주노총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민주노총이 7월 3~15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파업과 집회를 한다.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건설산업연맹·화섬식품노조·사무금융노조·전교조 등 산별노조들이 이 기간에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독립노조)과 함께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7월 15일(토)에는 민주노총이 제안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준)' 주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친사용자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어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한국경제〉).

또 경찰은 민주노총이 파업 집회를 신고한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의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 요구들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지키고 개선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노란봉투법 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민주노총의 7월 파업은 반윤석열 정서가 광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투기 중단,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성 강화, 노동시간 연장 중단,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

정치 파업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하고 투쟁을 탄압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에 더해 윤석열 퇴진을 내세우며 투쟁을 벌이는 것을 환영한다.

관건은 퇴진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이고 광범하게 (파업)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의 온갖 악행 때문에 반윤석열 정서는 광범하다.

노동시간 연장·임금 억제 시도, 물가·금리·공공요금 인상,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묵인(사실상 지지), 노조 탄압과 민주적 권리 억압 등은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년 직무수행 부정평가 1위(59퍼센트)를 기록했다.

윤석열은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상대적 온건파인 한국노총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6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이 모여 전국 단위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집회 제목은 “정권 심판”이었지만, 분위기는 퇴진에 가까웠다.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 온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는 윤석열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내 대여 강경파이자 이번에 사무처장이 구속된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준)'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윤석열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양회동 열사 분신 후에도 건설노조 공격을 지속하고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지만, 이는 정부를 향한 양 노총 다수 조합원들의 적개심을 더욱 돋게 했다.

민주노총의 7월 파업과 시위는 이러한 대중적 불만과 분노가 상당한 상황을 배경으로 벌어진다.

파업을 2주간 릴레이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 더 크게 집중적으로 벌어져야 윤석열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임금 인상 요구 완전 정당하다

깊어지는 경제 침체와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등에 업고 사용자들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발표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하니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고 나오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들의 주요 요구도 임금 인상이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는 말에서 드러나듯,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로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이만저만

한 게 아니다.

- 7월 13~14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 의료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 병원 적자 지원 등이 주요 요구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말로는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이제 와서 토사구팽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금인상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금속노조는 7월 12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을 한다. 현대자동차지부도 5년 만에 4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상당하다.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조선업 노동자들도 올해는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택배, 가전방문점검원 등)은 실질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핵심 요구로 7월 3일 파업을 벌인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평균 시급 6340원으로 현 최저임금의 66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20년째 제자리인 배송 수수료(임금) 인상을 절실히 바란다. 마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요일 휴무 사수를 내걸고 7월 6일 파업에 나선다.

- 6월 29~30일, 7월 6일 파업을 하는 민주일반연맹(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철폐,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맹성토한다.

-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도 임금 인상이다. 공무원 9급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특히 연차가 낮은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상당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7월 8일 총궐기 집회를, 전교조는 7월 13일 연가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불균등성은 있지만) 임금 투쟁들이 촉발되고 있다. 생계비 위기에 맞서 영국, 독일, 포르투갈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 벌어졌고, 프랑스에선 연금 개악저지 파업이 만만찮게 있었다.

한국에서도 생계비 위기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지중해 난민선 침몰

유럽연합의 국경 통제가 낳은 참사

이샤벨 링로즈

얼마 전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침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때에 그리스 앞바다에서는 더 끔찍한 해양 사고가 벌어졌다. 6월 14일 750명이 탄 난민선이 침몰해 최소 7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구조된 인원은 100명이 간신히 넘는다. 지중해에서 벌어진 참사로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다.

끔찍한 비극 앞에서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과 그 밖의 증거들을 통해 이것이 인재(人災)였음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사진 출처: 그리스 해안경비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6월 14일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공개한 침몰 전 난민선의 모습

이 참사는 어쩔 수 없었던 사고가 절대 아니다. 명백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살인이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

이 참사의 책임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덮느라 바쁜 무자비한 그리스 해안 경비대와, 유럽연합 국경 통제에 기초를 이루는 반(反)이민 정책에 있다.

6월 14일,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온 남녀노소 약 750명이 타고 있던 난민선이 그리스 남부 소도

시 필로스 앞 약 80킬로미터 해상에서 침몰했다.

그리스 사법부는 이 선박을 몰았던 밀입국 브로커 9명을 서둘러 기소했다.

하지만 이 참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당국이 난민선의 구조 요청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뒷문을 열어 주는 국경 통제 정책 탓이기도 하다.

구조에 굶뒀던 그리스 당국은 참사 책임을 부인하는 데서는 재빨랐다. 게다가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난민선을 견인하려다가 배가 뒤집혔을 가능성마저 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해안 경비대가 밧줄을 당기자 배가 좌우로 기우뚱하기 시작했어요.

“해안경비선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침몰했어요.” 유럽·영국으로 오는 안전하고 합법

적인 루트가 없는 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국경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난민들이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찾아 유럽과 영국으로 가려는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국경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질수록 브로커들의 사업만 더 번창할 것이다.

죽음을 끝낼 방법은 난민·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국경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 시위 현장에서 전하는 소식

참사 직후인 6월 15일 그리스 전역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그리스의 반(反)파시즘 단체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전했다. “시위 일정을 알린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시위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실로 장관입니다.

“아테네에서는 3만 명 넘게 시위에 나왔습니다. 참사 현장 인근 항구 도시부터 그리스 북부에 걸쳐 전국 스무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하루 행동은 난민에 대한 연대와 국경 봉쇄 정책에 대한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시위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리스 해안 경비대의 술책에도 분노했다고 콘스탄티누스는 전했다.

야만적 조치들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신민주당 정부도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신민주당 정부는 지중해와 에브로스강에서 난민들을 내쫓는 데에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입

국 난민 수를 2019년의 5퍼센트로 줄였다고 으스대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을 국경 경비대가 어떻게 야만적으로 내치는지 설명했다.

“그들은 그리스의 군도(群島)로 들어오려 애쓰는 난민들을 잡아다가 구명보트에 태우고는 바람이 튀르키예 쪽으로 불 때 바다로 떠내려 보냅니다.”

콘스탄티누스와 KEERFA 활동가들인 야소나스 아포스톨로풀로스와 자베드 아슬람은 파시스트들에게서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시위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리고 파시스트들이 의회에서 다시 의석을 얻으려고” 이런 협박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겁을 주려는 전술입니다. 아무도 그리스 해안경비대를 거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거리에서 우리와 맞붙지도 못하는 겁니다.”

현재 KEERFA는 희생자들과 그리스에서 난민 인정 심사를 받는 중인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럽국경해안경비대와 그리스 정부의 만행

BBC가 입수해 분석한 증거에 따르면, 난민선은 침몰 전에도 최소 7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는 참사 당시 난민선이 이탈리아로 무사히 항행하고 있었다는 그리스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그러더니 정부 대변인은 사태의 위험성을 파악하려는 해안경비대의 승선을 난민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 측의 사건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그들이 일부러 난민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생존자들은 난민선의 참혹

한 상황을 증언했다. 식수가 모자랐고, 침몰 전에 이미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스의 사회복지사 아레티아 지에주는 이렇게 말했다. “한 남성은 두 시간이나 이들의 시신들 틈에서 헤엄치다가 발견돼 구조됐어요.

“난민들은 물도 없이 닻새나 바다에 있었어요. 바닷물과 소변을 마시고, 선내 냉장고의 냉각수를 마시며 버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통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다수는 강제 추방 당하게 생겼다.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촛불행동 모금 부정 의혹 제기

윤석열의 반대 세력 치졸한 흠집내기

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한 기업주 정부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노동자 등 서민층에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폐단들을 위해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이간질, 비방(신뢰 떨어뜨리기)에 치중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애쓰고 있다.

친북 좌파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대북 강경파 김영호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 이런 기조의 일환이다.

경찰은 6월 25일로 종료된 건설노조 200일 집중 수사를 50일 더 연장했다. 양회동 조합원의 분신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윤석열은 정부 비판을 '가짜뉴스' 취급하고, 반대자들의 '불법'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다. 행여나 꼬투리를 잡으면 이를 침소봉대해 '진보의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그중 하나가 시민단체들의 재정 문제 꼬투리 잡기이다.

“괴담 단체”

5월 말 감사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회계 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 감사해 10개 단체 간부 16명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6월 4일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총 1조 1000억 원 규모)들을 감사해 1865건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86건을 수사 기관에, 300여 건을 감사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마치 세금 도둑인 양 여론 물이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시민단체가 마치 세금 도둑인 양 여론 물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변화(다원화, 신자유주의의 심화, 대중의 공익적 사회활동 참가 증대 등) 속에서 다양한 요구·활동과 공익의 연결을 표방하는 비정부기구 엔지오(NGO)의 활동이 성장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엔지오 지원도 늘었다.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거버넌스” 명목으로 각종 사회조사, 사회적 경제, 복지 사업 등을 엔지오에 위탁했다.

엔지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곧 국가가 바뀌는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지만, 그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과 부정부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대통령실의 6월 4일 발표를 봐도, 1조 1000억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 사업들에서 정부가 곧바로 수사 의뢰한 것은 극히 일부인 86건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보조금 감사와 수사 의뢰가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해 엔지오를 국가에 유착시키는 관행을 전면 뒤집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정권 교체에 따른 지급 대상과 그 비중이 바뀌곤 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 성향 단체 지원이 줄고, 보수 단체 지원이 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일이 더 요란하게 진행되는 것

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괴담 단체’로 지목하고 보조금 중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은 정부가 국가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에 가짜뉴스 유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를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데 대한 광범한 분노와 불안의 확산은 단지 운동 단체가 선동한 결과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여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운운하는 것은 2008년 반미 명박 촛불 운동 같은 일이 재연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여권이 문제 삼는 것이다.

촛불행동

한편,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는 10개 월째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모금을 문제 삼았다. 기부금품법을 어겼고, 후원금과 기금 집행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것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행동은 법원 판례를 들어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퇴진 집회는 초기에 수백 명 규모였다가 10월 22일 10만 명이 넘었고 그 뒤로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당연히 초기보다 후원도 늘고, 집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촛불행동은 모금 통장을 공개하고 매주, 매월 후원금 모금액과 지출을 공개해 왔다. 촛불행동은 서범수의 발언을 검증 없이 보도한 보수 매체들의 보도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허위 사실 유포 문제를 서범수에게 항의하며 공개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범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불투명한 재정 집행이라는 식으로 여론 물이를 하며 부패하고 위선적인 진보 세력이라는 음험한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려는 데서는 엔지오 보조금 문제 삼기와 일맥상통한다.

윤석열은 경찰·검찰·감사원 등을 이런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에도 감사원을 활용했다.

결국 수사·사정 기관을 활용한 엔지오 흠집 내기는 위기 탈출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의 일부일 뿐이다.

김문성

정의당의 “좌로 일보!” 혁신 재창당

“[정의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진 ‘노동 정치세력’, ‘기후·녹색 정치세력’, ‘제3의 정치세력’과 합당 및 통합의 방식으로 신당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정의당이 6월 24일 전국위원회에서 신당 설립 방식으로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재창당은 정의당이 지난해 결정한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저조한 성적을 거둔 후 논쟁 끝에 노동 기반 강화(또는 노동중심성 강화) 등을 중심 방향으로 한 재창당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이정미 지도부는 노동조합 지도층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해 왔다.

한편,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올 봄 노동계 정당들(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에게 내놓은 진보대연합당 제안에는 거리를 뒀었다.

이는 당 내에서 상반된 반발에 직면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의 제안은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금태섭, 양향자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만드는 중도 신당과의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해체 후 신당”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류호정 두 의원이 이를 대변했다.

한편, 정의당계 의견그룹 전환은 정의당이 민주노총의 제안과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단서와 함께).

이정미 지도부의 어정쩡한 재창당 노력은 “자강론”으로 불렸는데, 정의당 간부급 활동가들 다수는 그 정도로 의연 확대가 쉽지 않다고 본 듯하다. 6월 초 열린 전국 간부들의 연석회의에서 신당 창당을 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정미 지도부는 이 요구를 수렴해 정의당 내 의견그룹들을 모아 절충안을 만들고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좌선회

이 결정에는 두 가지가 특징인 듯하다.

하나는 이 기사 서두에서 인용한 구절대로 정의당의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노동과 녹색을



정의당 주류는 두 차례 선거 참패 후 필요한 만큼은 아니지만 왼쪽으로 노선의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

통합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9월 당대회에서 채택할 “사회 비전” 최종안을 위한 토론문도 이번 전국위에서 채택됐다.

이 문서는 현재의 “복합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적 비전으로 “사회 생태 국가”를 제안한다.

덜 급진적이지만 기존 노선의 좌선회를 명시한 것이다.

결정의 특징 또 하나는 노동계 4당간 선거연대에 조건없이 나서겠다는 태도 변화 표명이다.

“진보4당과 민주노총,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실천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시기 공동 공천전략 등 다양한 연대연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진보당과는 통합이 어렵다는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년 총선에 노동계 정당들이 공동 후보를 내자는 점에선 소통과 협력의 여지를 크게 열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6월 29일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전국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태섭·양향자 등이 추진하는 중도 신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살아왔던 어떤 궤적, 공당을 선택해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삶의 궤적

그런데 이정미 대표의 이 발언에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대표가 공개적으

로 반발했다.

이정미 대표가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위 결정을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살아왔던 궤적” 운운은 “오만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후자부터 논하자면,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나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의 삶이 국가 탄압과 계급 차별에 맞서 핍박 받으며 노동자 운동이나 피차별자 운동에 헌신해 온 삶과 “궤적이 다르다”고 말한(그리고 후자가 더 가치있다고 암시한) 것은 옳고 정직한 발언이다.

물론 과거 삶의 궤적이 전부인 건 아니다. 사람들의 삶(실천)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위 결정 전체의 맥락은 앞서 봤듯이 조성주 대표와 장혜영·류호정 두 의원의 정의당 해체 후 중도신당론과 전혀 다르다. 금태섭·양향자 등이 자본주의는커녕 신자유주의 반대조차 하겠는가?

세번째권력이나 장혜영 의원은 전국위 결정이 마치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또는 크게 반영)된 것처럼 해석했는데, 애초에 이것은 정확한 인식이 아니었다.

전국위에서 통합 대상 중 (사실상 중도신당론 측의 선호 용어인) ‘제3의 정

치세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부결됐지만, 이는 전국위 결정의 맥락에 비춰 보면, 중도신당론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분열을 피하고 싶어서로 보인다.

기존 노선의 산물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세 청년 정치인의 반발이 정의당이 벌여 온 기존 노선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의당은 정치 영역과 노동조합(과 현장 투쟁) 영역을 분리시키는 주류 사회민주주의의 분업론에 충실해 왔다. 기층 운동과 거리를 두고, 선거(당선)와 의회 협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주당 개혁파와의 연립정부를 목표로 한 노선을 추구해 왔다. 이는 간부들의 지향과 구성에도 반영됐다.

갈수록 정의당 내 무게중심은 의원단으로 이동하고, 진득하게 기층에서 운동을 조직하기보다는 기성 사회 주류의 관심에 들어 유명세 얻거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직 유지가 대중의 진보 염원과 노동운동보다(더구나 보통의 정의당원들을 대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지금 정의당 주류는 기존 노선이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참패를 겪고 난 후, 필요한 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아도 왼쪽으로 노선의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 노동 기반 확대나 모종의 반자본주의적 언설이 그것이다.

이 점에 비춰 보면, 정의당 세번째권력 측의 반응은 기존 노선의 최대 수혜자들이 왼쪽으로의 방향 조정에 반발하는 것이다.

그들과 정반대로, 우리 노동자연대는 정의당의 ‘반(半) 좌향좌’가 이전보다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급진적으로, ‘좌향좌’해야 한다고 본다.

김문성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오후 5시 이후 집회 말라?

집회·시위 권리 공격 — 대중 행동이 두려운 윤석열 정부

임준형

윤석열 정부가 야간집회 금지 시도 등 집회·시위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항거해 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벌인 것을 빌미로 삼았다. 윤석열은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다음 날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도 꾸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실질적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 6월 9일 같은 행사를 또 강제 해산했다. 5월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 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마구 때려 끌어내렸다.

경찰은 7월 3~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 집회들에도 무더기로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했다. 집시법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하는 식이다.

7월 1일 개최되는 서울 쿼어페레이드는 서울시장 오세훈의 방해로 서울광장에서 밀려나 을지로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도 불허했다.



5월 31일 대법원 앞 비정규직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하는 경찰

“시민 불편” 빚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시민 불편”을 명분으로 이런 조치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빚지 말라는 건 집회·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배자들은 보수 언론과 교육기관 등 자신의 입장과 세계관을 전파할 온갖 수단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이에 맞서 노동자 등 차별받는 대중이 자신의 요구를 알리고 관철할 최소한의 권리다.

무엇보다 그 “불편”은 양회동 열사를 분신케 한 노동운동 탄압, 공공요금 인상,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 방치,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용인, 성소수자 차별 등이 낳는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사람들은 교통 체증을 겪고, 구호가 시끄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불편을 시위하는 사람들 탓으로 여길지, 지배자들 탓으로 여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것은 투쟁의 정당성과 힘에 달려 있다.

사소한 불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납득시킬수록 집회·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 체증 같은 “불편”도 커지겠지만, 그걸 감수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1987년 6월 항쟁,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등 그런 일은 거듭 일어났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대규모 집회·시위는 참가자들도 변화시킨다.

자본주의가 낳는 소외, 착취, 차별은 노동자 등 차별받는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넓은 지역으로 이뤄진 선거구에서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고작 4~5년에 한 번씩 투표할 수 있고, 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거나 소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집회·시위에 나서면서 이런 파편화와 수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설 자신이 있게 되고, 변화의 중심에 서며, 더 전투적인

행동과 급진적인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도 커진다.

대규모 집회·시위는 다른 투쟁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무하는 효과도 낸다.

특히, 노동자들이 파업 등 자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하도록 자극한다면 큰 변화의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파업은 군부가 6월 항쟁의 성과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쫓기를 박았다.

능동성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선순환을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

시키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억압에 기대려는 것은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반영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법 개정도 하기 전에 집회·시위의 권리를 야금야금 침해하는 것에 맞서 집회·시위를 더 크고 강력하게 벌여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법 개악 효과를 낳고, 권리 침해가 굳어지게 될 것이다.

야간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도 이런 저항이 뒷받침될 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린 것도 2008년 촛불과 2009년 용산참사 항의 운동, 쌍용차 노동자 투쟁 등이 낳은 성과였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려는 윤석열
KBS 수신료 폐지하고 국가가
지원하라

★ 차별, 정체성 정치, 계급 투쟁



미국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성소수자 방어 파업을 하다



미국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매장 내 성소수자 상징물 설치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자긍심 파업”(Strike with Pride)을 벌이고 있다.

스타벅스 노조에 따르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150개 이상의 매장에서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거나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시애틀의 주력 매장을 포함해 21개 매장이 이번 파업으로 문을 닫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일부는 고객 대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미국 남부 매장 100여 곳에서 관리자들이 매장 내 ‘자긍심의 달’을 축하하는 성소수자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에 항의했다.

오클라호마시티의 한 매장 관리자는 성소수자 상징물 설치 금지가 “지역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등 SNS에는 매장 관리자가 설치된 무지개 깃발을 뜯어내는 영상도 올라왔다.

스타벅스는 성소수자 친화적 기업을 표방해 왔다. ‘자긍심의 달’을 매해 기념하고, 자사 광고에 트랜스젠더를 등장시켰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의료보험 복지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특히 남부)에서 우익의 성소수자 공격이 강화되면서 성소수자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자, 일부 매장 관리자들이 자긍심의 달 기념 장식물 설치를 거부한 것이다.

스타벅스 노조는 “스타벅스는 진보



사진 출처 Starbucks Workers United (트위터)

“노동자 권리가 트랜스·퀴어 권리다” 스타벅스 파업 노동자들이 뉴욕 자긍심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적 회사임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언한 가치에 너무 자주 부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무지개 깃발 [설치] 거부하는 성소수자 직원과 고객에 대한 단지 첫 번째 공격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스타벅스 사측은 트랜지션(성전환) 이후 관리자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자를 옹호하며, 잘못된 성별 대명사를 일부러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 등이 괴롭힘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후인 6월

26일, 스타벅스 사측은 매장의 성소수자 상징물 설치에 대해 더 분명한 통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 인정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저임금, 인력 부족, 드라이브 스루나 전화 주문 확대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등에 맞서 2021년 뉴욕 버팔로 매장을 시작으로 노조를 만들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불법적 직장 폐쇄를 포함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노조 결성을 막고 주도자를 해고했다. 심지어 일

부 매장에서 관리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면 트랜스젠더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좌파적 개혁주의 경향의 미국 언론 《자코뱅》은 스타벅스를 두고 “미국 최악의 노동법 위반자”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2년여 동안 미국 전역 스타벅스 매장에 노조가 확대됐고, 노동자들은 각 매장에서 이러저러한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둬 왔다. 이번 파업도 그 연장선에 있다.

미국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원한다.

성지현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왜 우파는 젠더 이슈에
집착하는가?**

7월 12일(수) 오후 8시

발제 정진희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저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편집자



참가신청

bit.ly/0712-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